

01

2024 소방간부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 ② 가치지향적 관리를 중시하였다.
- ③ 정책보다는 논리실증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 ④ 실천성과 적실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 ⑤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③ (X) 논리실증주의에 초점을 둔 것은 행태론이며,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답 ③

02

2024 소방간부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란 관료가 기존 및 변화된 상황에서 모두 무능력하여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 ② 관료제의 권력집단화 경향에 의해 국민에 대한 둔감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번문욕례(red tape)란 국민의 요구보다 규칙·절차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 ④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란 관료들이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목표보다 수단을 더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 ⑤ 관료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거나 관료가 창의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능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해설

① (X) 훈련된 무능이란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또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하는 행동이 과거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그것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행동을 변동된 조건에 적응시키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 ①

03

2024 소방간부

에머리(Emerly)와 트리스트(Trist)가 구분한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적-집약적' 환경의 예로는 독과점이 대표적이다.
- ② '격동의 장'에서는 계획을 통하여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다.
- ③ '교란-반응적' 환경의 예로는 1차 산업의 환경 등이 있다.
- ④ '교란-반응적' 환경보다 '격동의 장'에서의 불확실성·복잡성이 더 높다.
- ⑤ '정적-임의적' 환경에서는 각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쟁한다.

해설

- ① (X) 소수독점시장은 교란적·반응작용적 환경의 예입니다.
- ③ (X) 농업과 광업 등 일차산업의 환경은 평온한 집약적 환경의 예입니다.
- ② (X), ④ (O) 격동의 장은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동하는 환경입니다. 격동의 장에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개별적인 구성체제들의 예측능력과 통제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입니다.
- ⑤ (X) 상호작용하며 경쟁하는 환경은 교란적·반응작용적 환경입니다.

* Emery와 Trist의 환경유형론

- 1) 환경적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환경의 기본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
- 2) 단순한 환경으로부터 점차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단계를 의식하면서 분류한 네 가지 환경유형은 아래와 같음

평온한 무작위적 환경	· 가장 단순한 환경유형, 소규모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갖는 경향 · 환경적 요소들이 안정되어 있고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환경 · 태아가 처해 있는 환경, 유목민이 처해 있는 환경
평온한 집약적 환경	· 환경적 요소가 안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유형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는 환경 · 계절의 지배를 받는 식물의 환경, 유아의 환경, 농업과 광업 등 일차산업의 환경
교란적·반응작용적 환경	· 역동적 환경: 대상체제와 유사한 체제들이 등장하여 상호작용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각 체제는 서로 다른 체제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유아기를 벗어난 사람, 소수 독점에 관한 경제이론
격변적 환경 (격동의 장)	·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동하는 환경 ·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구성요소들이 여러 갈래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에 역동적 과정이 내재되어 있음 · 격동의 장에서는 특정한 구성체제 간의 교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을 훨씬 초과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나타남

정답 ④

04

2024 소방간부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조직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주도적·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조직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다.

- ① 거래비용이론
- ② 상황적응론
- ③ 조직군생태론
- ④ 인간관계론
- ⑤ 자원의존이론

해설

조직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주도적·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임의론을 의미합니다. 임의론은 개인이나 조직이 환경이나 내부적 상태에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해 행동을 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을 형성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기 중 자원의존이론이 임의론입니다.

정답 ⑤

05

2024 소방간부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 ㄴ. 임용권자는 예산의 감소에 따라 과원(過員)이 되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ㄷ.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 ㄱ. (O)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 ㄴ. (O)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 ㄷ. (X)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06

2024 소방간부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회형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중시한다.
- ②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는 비독립합의형에 해당한다.
- ③ 위원회형은 비독립단독형에 비해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 ④ 소청심사 등 준사법기능은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 ⑤ 비독립단독형은 위원회형에 비해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더 보장한다.

해설

- ① (O) 위원회형은 독립합의형을 의미합니다.
- ② (X)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는 독립합의형입니다.
- ③ (X) 위원회형은 결정주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④ (X)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이 있을 때 이를 재결(심리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준사법적 기능은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 ⑤ (X) 위원회형의 경우 합의체 구성원의 임명 시기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07

2024 소방간부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 중심이기 때문에 지출에 따른 효과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 ②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 ③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④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⑤ 예산을 집행할 때 재량권의 범위가 제약되기 때문에 신속적이지 못하다.

해설

- ③ (O) 품목별 예산제도는 1912년 미국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일명 태프트위원회)'에서 도입을 권장하였습니다.
- ④ (X)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⑤ (O) 지출 대상 및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합니다.

정답 ④

08

2024 소방간부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② 비서관
- ③ 소방공무원
- ④ 검사
- ⑤ 국가정보원 직원

해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소방공무원,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 특정직
- ② (X)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정답 ②

09

2024 소방간부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④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과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⑤ 적극행정의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② (O)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 ③ (O)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3항
- ④ (O)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 ⑤ (X) 적극행정 추진체계상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적극행정 총괄 및 제도운영을 담당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16조 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정답 ⑤

10

2024 소방간부

근무성적평정의 타당도, 신뢰성,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들에게 중간이나 평균치(보통) 정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② 역산식(逆算式) 평정 관행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선입견과 편견
- ⑤ 근접 효과(recency effect)

해설

평균치(보통) 정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 → 집중화 경향

- ② (X) 역산식 평정이란 평정자가 미리 강제 배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답 ③

11

2024 소방간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이 방법은 2005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 과정과 신입관리자 과정 훈련에 적용되었다.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이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참가자들이 소그룹 규모의 팀을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다.

- ① 감수성훈련
- ② 역할연기
- ③ 신디케이트
- ④ 사례연구
- ⑤ 액션러닝

해설

- ③ (X) 분임연구(syndicate)란 피훈련자들을 10명 내외의 분반으로 나누어 분반별로 동일한 문제를 토의해 문제 해결 방안을 작성한 후 다시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 분반별로 작성한 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 ⑤ (O)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 → 액션러닝

정답 ⑤

12

2024 소방간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① (X) 정부는 예산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①

13

2024 소방간부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에 포함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합리적 행위자 모형
- ㄴ. 점증모형
- ㄷ. 조직과정모형
- ㄹ. 관료정치모형
- ㅁ. 쓰레기통모형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해설

앨리슨은 '의사결정의 본질(1971)'에서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3가지 모형(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답 ②

14

2024 소방간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 행위의 금지
- ② 청렴의 의무
- ③ 정치 운동의 금지
- ④ 복종의 의무
- 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해설

- ① (O) 「국가공무원법」 제66조
- ② (O)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③ (O)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④ (O)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⑤ (X)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정답 ⑤

15

2024 소방간부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② (O)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 ③ (O)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④ (X)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집니다.
- ⑤ (O)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47조(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④

16

2024 소방간부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해설

- ① (X)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X)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③ (O)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 ④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 ⑤ (X) 처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③

17

2024 소방간부

다음 중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자연독점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외부효과
- ④ X-비효율성
- ⑤ 불완전경쟁

해설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정답 ④

18

2024 소방간부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나 혁신적 주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 ③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 ④ 엘리트들은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힘이나 영향력, 권위에 의해 해당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 ⑤ 엘리트들의 가치중립적 행동을 강조한다.

해설

⑤ (X) 무의사결정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입니다.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엘리트가 권력을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중립적 행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 ⑤

19

2024 소방간부

대표관료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실적주의 강화
- ② 행정의 대응성 향상
- ③ 외부통제 약화 현상의 개선
-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 ⑤ 국민 대표성 강화

해설

① (X) 대표관료제는 능력 등을 기준으로 임용하는 실적주의의 부작용(소외 계층 발생)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대표관료제는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합니다.

정답 ①

20

2024 소방간부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②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④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⑤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해설

- ① (O) 「정부조직법」 제19조
- ② (O)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 ③ (X) 중대범죄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사무가 아닙니다.
- ④ (O)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
- ⑤ (O) 「정부조직법」 제30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제30조(외교부)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정답 ③

21

2024 소방간부

법률상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로서의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의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20조
- ② (X) 1개월이 아닌 1년 이내입니다.
- ③, ④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⑤ (O)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②

22

2024 소방간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닌 것은?

-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④ 자격심사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 ⑤ 제명

해설

자격심사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은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제명

정답 ④

23

2024 소방간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 ③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할인율을 낮게 적용할수록 편익의 미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 ⑤ 사업 및 정책의 성과 여부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④ (X)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편익의 미래 가치의 할인이 적어져 편익의 미래 가치가 (할인율이 높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정답 ④

24

2024 소방간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자원에 비해 형성과정에서 투명하고 경계가 명확하여 상호 간 거래가 촉진된다.
- ② 공유되는 행동 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다.
- ③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 ④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해설

① (X) 사회적 자원은 무형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원은 경제적 자원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정답 ①

25

2024 소방간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일지라도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
- ④ 지속적인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정하였다.
-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업무와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해설

- ① (O) 「전자정부법」 제5조
- ② (O) 「전자정부법」 제5조2
- ③ (X)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O) 「전자정부법」 제5조3
- ⑤ (O)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③